

프랑스 : 의회 개편과 향후 노동 관련 정책을 둘러싼 논쟁 전망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프랑스

이두형 (프랑스 루미에르 리옹2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전격적인 의회 해산 이후 치러진 조기 총선 결과 프랑스 의회 권력이 다시 개편되었다. 집권당인 르네상스를 포함한 범여권 세력은 상당수의 의석을 잃었지만 극우정당인 국민전선과 좌파 선거연합인 신인민전선이 세를 확대함에 따라 향후 정국 운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앞서 2024년 6월 9일 실시된 유럽연합 의원 선거에서는 유럽 전역을 휩쓴 극우 열풍의 분위기 속에서 프랑스에서도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이 득표율 31.37%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반면 집권당인 르네상스 등을 포함한 범여권 세력은 득표율 14.6%로 둘째로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국민전선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뒤처지는 결과를 얻었다.¹⁾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선거 직후 의회 해산을 선언하며 사실상 재신임 투표의 성격을 지닌 조기 총선을 진행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조기 총선 후 범여권은 의회 다수 세력의 지위를 상실하며 의회 제2세력으로 줄어들었다. 1차 결선 투표 이후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던 국민전선은 최종적으로 제3세력이 되었으며, 의석수로는 신민중전선이 의회 다수 세력으로 올라섰다. 이를 고려해 좌파 선거연합인 신민중전선의 노동 관련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향후 프랑스에서 전개될 논쟁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1) Libération, “Résultats des européennes 2024 : le RN à 31,4%. Renaissance devance le PS d’un rien, les Écologistes juste au-dessus des 5%”, 2024.6.10.

■ 프랑스 의회 재편

조기 총선에 앞서 진행된 2022년 6월 총선에서는 범여권 선거연합인 앙상블이 245석을 차지하며 다수 세력을 이뤘다. 비록 앙상블은 의회 전체 의석 577석 중 과반인 289석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둘째로 많은 의원을 배출한 좌파 선거연합인 신생태사회인민연합의 131석과 비교할 경우 100석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의회 권력을 잡았다. 이에 반해 국민전선은 89석을 얻었다.

이번 조기 총선 진행 과정에서 의회 내 세력 균형이 급격하게 뒤흔들릴 조짐은 계속해서 나타났다. 먼저 6월 30일 1차 결선 투표 출구조사에서는, 전망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국민전선이 소속된 선거 연합세력이 230~280석²⁾ 또는 240~270석³⁾으로 의회 내 다수 세력이 된다고 전망했으며, 일부에서는 260~310석⁴⁾까지 예측하며 경우에 따라 과반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표 1> 2022년 6월 프랑스 총선 결과에 따른 정치세력별 의회 의석수

(단위 : 석)

정치 세력	의석수
앙상블	245
신생태사회인민연합	131
국민전선	89
공화당	61
기타 좌파	22
기타 우파	10
지방분권주의	10
기타 중도	4
민주독립연합	3
주권주의 우파	1
기타	1

자료: Vie publique(2024), “Législatives 2022 : résultats définitifs et composition de la nouvelle Assemblée”, <https://www.vie-publique.fr> (2024.7.17).

- 2) Franceinfo, “Résultats du 1er tour des législatives 2024 : à quoi pourrait ressembler la future Assemblée nationale en. Ombre de siège ?”, 2024.6.30.
- 3) TF1, “Résultats des élections législatives : le RN en tête devant la gauche et le camp présidentiel”, 2024.6.30.
- 4) BFM TV, “Résultats élections législatives 2024 : le RN en tête avec 33%, Bardella se voit “premier ministre de cohabitation””, 2024.6.30.

예상했다. 앞선 유럽연합 의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전선이 가장 많은 투표를 획득하며 프랑스 의회의 주도 세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랐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달랐다. 1차 결선 투표로부터 일주일 뒤인 7월 7일 실시된 2차 결선 투표 결과, 신인민전선이 182석을 얻으며 의회 다수 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어서 범여권 선거연합 앙상블에서 168석을 확보하며 둘째로 많은 의원을 배출했다. 반대로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200석 이상은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던 국민전선 선거 연합세력은 예상보다 100석 가까이 줄어든 143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는 극우 세력이 의회 권력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한 세력 결집이 있었다. 또한 좌파 세력⁵⁾과 집권당 중심⁶⁾으로 표가 분산되어 국민전선 후보가 의회에 진출하게 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한쪽 진영의 후보가 사퇴하는 등 사실상 전략적 선거 연대가 이루어진 것도 예상과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데 영향을 미쳤다.

조기 총선의 결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됐지만 과반을 확보한 세력이 없는 데다 어느 쪽도 확고한 우위를 점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의회 제1세력을 차지

<표 2> 2024년 프랑스 조기 총선 결과에 따른 정치세력별 의회 의석수

(단위: 석)

정치 세력	의석수
신인민전선	182
앙상블	168
국민전선 연합	143
공화당	46
기타 우파	14
기타 좌파	13
중도	6
지방분권주의	4
기타	1

자료: Le Monde, “Les résultats des élections législatives 2024”, 2024.7.7.

- 5) Le Journal du Dimanche, “Législatives : Mélenchon annonce le retrait du NFP en cas de triangulaire et de troisième place”, 2024.6.30.
 6) Public Sénat, “Attal “assume” le désistement au profit “de candidats qui défendent les valeurs de la République””, 2024.6.30.

한 신인민전선이 새로운 총리 인선을 주도하는 등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신인민전선의 노동 관련 정책 방향과 논쟁

최저임금(Smic) 인상

신인민전선에서 내건 경제 및 노동 관련 정책안 중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을 야기하는 것 중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이들은 현재 1,400유로(한화 약 211만 3,500원)에 조금 못 미치는 세후 월 최저임금을 1,600유로(한화 약 242만 3,000원)까지 약 14.3% 올리겠다고 제안했다.⁷⁾ 실제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약 300만 명에 달하는 프랑스 인구에게 적용될 것이며, 이는 지난 1981년 정부에 의한 10% 인상과 비교해도 전례 없는 최저임금 인상 사례가 된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신인민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시민들의 구매력이 향상됨으로써 소비가 촉진되고 그에 따른 경제 활력이 보다 높아지면 서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진다고 본다. 또한 이들은 사회 불평등 완화와 같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정도에 그치는 최저임금 생활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상당수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체계에 역동성을 가져와 노동자 생활 수준 전반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학자 미카엘 제무르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정제되어 있는 최저임금 생활자가 현재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약 17%에 달한다.”라고 강조했다. 파리 8대학 경제학 교수 클레망 카르보니에르는 “재앙적 인상이라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스페인과 독일의 사례를 들며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⁸⁾

그럼에도 이 방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될 경제계에서는,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중소기업연맹(CPME)의 조사에 따르면 세후 월 최저임금이 1,600유로에 달할 경우, 약 14%의 경영인들이 사

7) Libération, “Pouvoir d’achat : Hausse du smic, la mesure phare qui divise”, 2024.7.10.

8) France Bleu, “Augmenter le SMIC à 1,600 euros : “Les arguments catastrophistes sont faux”, défend un économiste”, 2024.7.10.

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약 27%는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 일부를 해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독립수공업자 및 프리랜서를 대표하는 U2P의 대표 미셸 피콘은 “상당수의 소규모 상공업자와 수공업자들은 매월 세후 1,600유로의 최저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피력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신인민전선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초소규모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⁹⁾ 예를 들어 공공 금융 기관을 통한 무이자 대출과 임시 유동성 지원, 또 이와 같은 초소규모 기업들의 공공시장 접근성 향상 방안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 추산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저임금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을 면제하는 정책은 이미 시행 중이며 2022년 기준으로 약 300억 유로(한화 약 45조 2,600억 원)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은퇴연금 개혁

신인민전선의 공약 중 향후 프랑스 사회에서 뜨거운 안건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또 다른 주제는 최근 정부 주도로 도입된 은퇴연금의 폐지다.¹⁰⁾ 2023년 3월 16일 엘리자베트 보른 당시 프랑스 총리는, 총리가 재정 또는 사회보장 예산 등과 관련한 법안을 표결하기에 앞서 의회에서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은 통과된 것으로 인정하는, 헌법 49조 3항을 활용해 은퇴연금 개혁안을 도입했으며, 이는 같은 해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법정 은퇴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은퇴연금 분담금 납부 기간도 2027년부터는 42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난다. 2020년 발효된 투렌 개혁에 따라 납부 기간의 연장을 2035년에 이르러 완료하도록 한 것을 앞당긴 것이다.

은퇴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당시에도 좌파 진영에서는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사실상 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입된 개혁안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다. 신인민전선은 현재 도입된 개혁안을 폐지함으로써 법정 은퇴개시 연령을 기존의 62세로 되

9) Franceinfo, “Législatives 2024 : quatre questions sur la hausse du smic à 1 600 euros, une mesure proposée par le Nouveau Front Populaire et qui divise”, 2024.7.10.

10) Nouvel Obs, “4 questions sur l’avenir de la réforme des retraites, que le NFP veut abroger”, 2024.7.8.

돌리고자 한다.

다만 신인민전선이 의회 내 다수 세력을 점했다 하더라도 과반 확보에는 실패하면서 독자적으로 의회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은퇴연금 개혁을 주도한 범여권 세력은 물론 극우세력까지 적잖은 의석을 확보하며 세력의 균형을 이룬 상태이므로 정치적 합의는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신인민전선의 주도로 인선하는 총리를 통해 이전 개혁안 통과와 마찬가지로 헌법 49조 3항을 활용해 기존 개혁안을 폐지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¹¹⁾

다만 국민전선에서도 의회 다수당이 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은퇴연금 개혁안을 폐지할 것이라고 수차례 의견을 밝힌 바 있다.¹²⁾ 조기 총선 1차 결선 투표를 앞두고 조르단 바르텔라 국민전선 대표는 한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적 재앙인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을 명백히 되돌리고 싶다.”라며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조기 총선 결과 두 정치 세력 모두 상당한 의회 영향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은퇴연금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주요 안건으로 떠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인민전선과 국민전선이 기존 은퇴연금 개혁안을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지만 정치 방향과 이념에서 극심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실제 의회 논의의 전개 방향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민정책

신인민전선의 공약 중에서 가장 큰 정치적 논쟁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민정책이다.

특히 유럽 전체에서는 물론 프랑스 내에 확산되는 반이민 정서에 따라 이민정책은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조기 총선의 결과에도 반영되어 있다. 확보한 의석수를 선거연합 진영이 아닌 단일 정당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강력한 이민 정책의 시행을 최우선 과제로 내놓은 국민전선은 2022년 총선에서의 89석에서 2년 만에 126

11) Franceinfo, “Législatives 2024 : “Ce qui s’est fait par 49.3 peut se défaire par 49.3”, assure Olivier Faure”, 2024.7.8.

12) Le Monde, “Jordan Bardella revient sur la promesse du RN d’abroger la réforme des retraites s’il parvient au pouvoir”, 2024.6.12.

석으로 4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늘리는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정당을 기준으로 봤을 때 둘째로 많은 의원 수를 확보한 집권당 르네상스의 98석보다 약 30석 더 많은 결과다.

물론 이번 조기 총선에서는 진영별 선거연합이 이뤄지면서 정당 간 후보 등록이 전략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 또한 2차 결선 투표를 앞두고 국민전선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표 분산을 막기 위한 후보 사퇴가 잇따랐기에 정당 간 비교는 상대적으로 의미가 적다. 그럼에도 유럽연합 의원 선거에서부터 이번 조기 총선까지 반이민 정서 등의 확산에 따라 국민전선 및 극우진영의 영향력이 프랑스 사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신인민전선의 이민정책은 이러한 흐름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와 학생, 취학 아동의 부모들이 합법적으로 프랑스에 머물 수 있도록 거주 비자 취득을 보다 수월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¹³⁾ 또한 10년 거주를 기본으로 하는 비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앞서 프랑스 정부는 이민법 개정을 통해 특정 부문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예외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프랑스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¹⁴⁾ 2024년 1월 28일 개정된 이민법은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프랑스에서 적법하게 체류하도록 허용했다.

이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정부가 인정하는 인력 부족 업종에서 최근 24개월 내에, 연속해서 또는 단절이 있어도 노동 기간을 합했을 때 최소 12개월간 유급으로 고용되었어야 하며, 체류비자 신청 당시 인력 부족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 또한 프랑스에서 최소 3년간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1년의 “임시 노동” 또는 “고용” 체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비자 발급 과정에서 공공질서 준수, 프랑스 사회로의 통합, 프랑스 사회와 공화국 가치 준수 정도 등도 함께 고려한다. 기존에는 노동 체류 비자 발급 절차에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지만, 개정안을 통해 노동자 스스로가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체류 비자의 예외적 발급은 일 단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13) BFM TV, “Élections législatives 2024 : Le programme du Nouveau Front Populaire (NFP), l’alliance de gauche”, 2024.7.7.

14) Entreprendre.Service-Public(2024), “Loi immigration : quels changements dans le volet “travail?””,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 (2024.7.18)

국민전선은 해당 이민법 개정안에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의회 권력을 잡을 경우 이번 여름부터 이민에 대한 긴급조치를 담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선거기간 동안 공언해왔다.¹⁵⁾ 5년간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최근 2년 내 8개월 동안 또는 5년 내 30개월 동안 일을 했다는 것과 급여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노동자, 또는 5년 동안 프랑스에 살면서 최소 3년 동안 학교를 다닌 자녀가 있는 부모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도 프랑스 내 체류를 적법화하는 일명 “마누엘 발스 고시”¹⁶⁾를 폐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국민전선이 비록 최근 이민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이보다 더 포괄적이고 유연한 이민정책을 지향하는 신인민전선과 극명한 대척점에 설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일손 부족 문제가 프랑스 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민정책은 경제와 노동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신인민전선은 프랑스 경제가 마주한 인력난과 같은 현안보다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이민정책에 접근한다. 반면 국민전선은 공화국으로 표명되는 프랑스의 가치와 안보의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바라본다. 이민정책을 둘러싼 의회 두 중심 세력 간 입장 차이는 향후 정국에서 격렬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 노동시장에도 적잖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프랑스에서 치러진 조기 총선은 일단 신인민전선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좌파진영이 향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정치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새로 구성된 의회는 좌파진영과 극우진영, 그리고 범여권 진영이 사실상 권력을 삼등분하며 긴장의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록 1차 결선 투표에서 드러난 예측과는 달리 국민전선이 다수당이 되기는커녕 제3세력으로 밀려나는 결과를 맞았지만, 극우세력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국민전선은 단일 정당으로는 의회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인민전선이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사회당, 공산당, 녹색당 등 여러 정당이 합세한 선거연합 세력이라는 점도 정국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무엇보다 당장 총리 인선을 두고 내부 갈등이 불거지면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신인민전선에 대한 지지보다는 국민전선의 의회 권력 장악을 막기 위한 차선의 선택으로 인해 신인민전선이

15) Les Échos, “Législatives 2024 : ce tour de vis que promet le RN dès l’été pour les travailleurs étrangers”, 2024.6.26.

16) France 24, “Sans-papiers : Valls recadre l’attribution des titres de séjour”, 2012.11.28.

의회 제1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는 것도 정치 동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좌파진영이 총리 인선 등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정국이 흘러갈 것이며 그에 따라 노동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에서 의회 권력 재편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여소야대라는 점에서 프랑스와 비슷한 정치적 맥락을 지닌 한국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KLI**